코스피 5000시대…환율 안정·소비 증대 견인하나

정부, 배당세 인하 등 '증시 선진화' 주력…상승 잇도록 제도 개편

"여전히 저평가" vs "반도체 제외 실적 전망 안갯속" 주장도 상존

코스피가 22일 출범 46년만에 처음으로 장중 5000선을 돌파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코스피 5000 돌파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형주를 비롯해 국내 주요 산업들에 대한 성장 기대감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한 실질적인 세금 인하 등 정부의 증시 개선 노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증시 선진화' 정책 효과보나=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코스피 5000' 달성에 이어 앞으로도 국내 증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 투자자에 대한 혜택 마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외환·자본시장 혁신, 투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투자자 친화적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최근 코스피 급등 추세를 이끈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금은 적은데 세금만 높은 한국 주식 대신 나스닥 등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자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며, 배당소득 액별로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배당소득 중 2000만원 이하 15.4%, 나머지는 최고 45% 수준에 달했던 세율을 생각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향후 코스피 상승·하락은 '증시 선진화'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증시 선진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MSCI는 세계 주요 증시들을 매년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개척시장), 독립시장으로 나누는데, 정부는 현재 시장 접근성 부족 등의 평가로 신흥시장에 머물고 있는 한국 증시를 선진시장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한국 증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현지 금융사를 통한 외국인 개인 투자자 유입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정비, 기업 영문 공시 확대, 투자자 친화적 배당 절차 개선시 인센티브 부여 등 방안을 마련했다.

◇증시 '부의 효과' 주목…여전히 저평가 의견도=증시 호황이 소비심리 개선을 이끄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일으킬 수 있을지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코스피가 올해 첫 거래일부터 쉴 틈 없이 가파르게 치솟았던 만큼, 국내 투자자들은 일부만 증시 호황 수혜를 입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및 부동산 쏠림 등으로 내수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코스피 5000 돌파에도 여전히 국내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주가수익비율(PER)이 전날 기준 20.52배로 지난해 6월 2일(13.39배) 대비 53.2% 증가하는 동안 코스피는 81.9% 뛰었다는 점에서다. 또 코스피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역시 0.92배에서 1.58배로 올랐지만,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편입종목의 PER과 PBR이 각각 31.05배, 5.51배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 증시가 저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설명이다.

정부와 국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받고 있는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상장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에도 나선다. 주주들이 실현하는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국내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조현상 부회장 다보스포럼 글로벌 공급망 협력 논의 주도

세계 고위급·CEO 잇단 만남

민간 경제외교 '광폭 행보'

조현상(오른쪽) HS효성 부회장이 2026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데벤드라 파드나비스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총리와 인도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HS효성 제공〉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2026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세계 화학 산업과 국제 공급망 협력을 둘러싼 핵심 논의의 중심에 섰다.

조 부회장은 세계 주요 화학 기업 최고경영진, 각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나 중장기 산업 전략과 친환경 전환, 세계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민간 경제외교 행보를 본격화했다.

22일 HS효성에 따르면 조 부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세계 주요 화학 기업 최고경영진들이 모이는 핵심 섹션인 '화학 거버너스 미팅'에 공식 초청돼 참석했다.

조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HS효성이 추진 중인 친환경 소재 사업과 저탄소 전환(Net-Zero) 전략을 소개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둘러싼 글로벌 공감대 형성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조 부회장은 그동안 다보스 포럼에 꾸준히 참석하며 세계경제포럼 '차세대 글로벌 리더'에 뽑혔고, 주요 20개국(G20)의 '젊은 글로벌 리더' 조직인 'YGL G20 이니셔티브'에 유일한 한국인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 경제 협력 무대에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세계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의 '직접 교류'도 눈에 띄었다.

조 부회장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재무장관을 만나 북미를 포함한 세계 공급망에서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역할을 강조했다. 샴페인 장관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면담에서 조 부회장은 최근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강화된 양국 협력에 감사를 전하고 향후 한국 기업들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한 행보도 이어졌다.

조 부회장은 데벤드라 파드나비스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총리를 만나 인도 서부 산업 거점 지역에 대한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파드나비스 주총리는 "글로벌 소재 강자인 HS효성이 해당 지역 투자를 통해 인도 내수와 수출, 고용 창출, 인도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부회장은 "앞으로도 각국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고 친환경·저탄소 전환과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호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관계자들과 지역 정치계·경제계 인사들이 22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 호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광주상의 "임대보증금 제도, 건설 임대 사업자 부담 키워"

총리실·HUG에 개선 건의문

광주지역 건설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개편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1월 16일자 8면〉과 관련해 지역 경제계가 정부에 공식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 제도와 관련해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HUG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HUG 임대보증금보증 제도의 감정평가 방식이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보증 사고율이 낮은 건설임대 사업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현장에서 과도한 자금 부담과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제도는 HUG가 지정한 5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 금액을 보증 기준으로 적용하는 구조다. 그러나 광주상의는 이 방식이 비수도권 지역의 거래 여건과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존에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설임대 사업자들이 보증 유지를 위해 대규모 현금 납부나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상의는 "특히 전세사기의 주요 발생 원인이 개인 임대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보증 사고율이 현저히 낮은 건설 임대 사업자에게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정평가 금액 하락으로 임대 사업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보증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 전액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세입자들이 재감정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과 계약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구조가 장기적으로 건설 임대 사업자의 경영 악화를 누적시켜 오히려 보증 사고 확대라는 새로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변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지속될 경우 HUG 스스로 관리해야 할 재정 위험을 키우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광주상의는 전세사기 발생 구조와 실제 보증 사고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설 임대 사업자를 현행 임대보증금보증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도가 개편 시행된 지난해 6월 이전에 이미 보증서를 발급받아 운영 중인 기존 단지에는 현행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이번 건의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오천피' 공약 李대통령, ETF 수익률도 '대박'

지수 상품 투자 2700만원 수익

코스피가 22일 장중 5000을 돌파하면서 국내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한 이재명 대통령의 수익률도 대박이 났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28일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하면서 ETF 상품 4000만원어치를 매수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간 매월 1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더 투자해 모두 1억원어치를 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매수한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 200'과 코스닥150 지수가 오를 때 이익을 얻는 'KODEX 코스닥150' ETF다. 매월 100만원씩 5년간 적립식으로 'TIGER 200' ETF에도 투자했다.

이 대통령이 'KODEX 200'을 매수한 이후 직전 거래일인 21일까지 수익률은 103.27%다. 'KODEX 코스닥150'은 같은 기간 31.40% 상승했다. 이 대통령의 평가 이익은 단순 계산해도 27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대통령이 개별 주식보다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하면서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매월 일정액을 적립식으로 ETF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면서 ETF 순자산 총액은 지난 1월 5일 3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새해 들어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ETF 순자산은 지난 20일 종가 기준으로 327조691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집계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국민 55% "올해 소비 지난해보다 늘릴 것"

상위 60% "확대" 하위 40% "축소"

올해 국민 중 절반 이상은 작년보다 소비 금액을 늘릴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60%까지는 소비를 늘릴 계획인 경우가 더 많고 나머지 하위 40%는 축소할 계획인 경우가 더 많아 소비심리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국민 소비지출계획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8%는 올해 소비를 전년 대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율로는 0~5% 늘린다는 응답이 24.4%로 가장 높았고, 5~10%는 13.9%, 10~15%는 13.9% 등이었다.

다른 45.2%는 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0~5%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13.7%였고, -5~-10%(9%), -10~-15%(7.3%)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소비 계획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40%(1~2분위)는 올해 소비를 작년에 비해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상위 60%(3~5분위)는 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소득을 줄이겠다는 경우는 하위 20%(1분위)에서 60.3%로 가장 많았다. 소비를 줄이는 이유로는 고물가(29.2%), 실직 우려 또는 근로소득 감소(21.7%), 자산 및 기타소득 감소(9.2%) 등이 나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중고생도 '엄카' 대신 본인 명의 가족카드 쓴다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중고생들이 '엄카'(엄마카드)를 빌려 쓰는 대신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23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모의 신청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가 발급된다.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발급하도록 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에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는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한다. 타인카드 사용으로 분실신고와 피해보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고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의 카드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중기부, 광주·전남 수출 기업 정책설명회

광주·전남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금융·연구개발(R&D) 등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정책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열린다.

22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광주·전남중기청)에 따르면 광주권 설명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광주무역회관 12층 연수실에서 열리며, 전남권 설명회는 29일 오후 2시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5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통상 환경 속에서 수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수출·정책 금융·R&D 등 분야별 지원 정책을 안내한다. 또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전남중기청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확대를 모색하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안내와 소통을 통해 지역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4952.53 (+42.60)
↑	코스닥	970.35 (+19.06)
↓	금리 (국고채 3년)	3.109 (-0.029)
↓	환율 (US D)	1470.00 (-1.30)

〈오후 4시 59분 기준〉